

# 요즘 노동운동, 요즘 민주노총

**조준상**

한겨레신문 노동조합 조합원

1

뭔가 왕창 잘못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 그렇고, 언론노련이 그렇습니다. 제가 속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안 민주노총에서 북한과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를 연다는 데,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는 생각은 머리 속에서 맴도는데, 허전합니다. 제게는 역사적 의의가 큰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보다 남한에서 '죽을 쑤는' 듯이 보이는 민주노총의 현실정치가 더 무겁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직속 상급단체 언론노련이 언론 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

진형구라는 공안검사의 취증무용담에서 비롯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태가 터졌을 때, '하늘이 민주노총 도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지하철노동조합 파업이 깨진 뒤에 침침해 있던 민주노총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호재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만 하면 조직을 추스리고 좀더 좋은 운신의 폭도 넓히고, 떨어진 위상도 만회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것마저 놓쳐버렸습니다. 안팎의 여건상 투쟁보다 협상을 우선해야 할 때는 총파업한다고 힘을 빼놓더니만, 정작 힘써야 할 때는 청와대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약속 한마디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노사정 위원에서 맷은 사회적 합의는 '현신짝'이고 청와대에서 던진 정치적 약속은 믿을 수 있다는 발상에 어안이 병벙할 따름입니다.

### 3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민주노총은 부정할지 모르나, 결국 노사정위원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위에서 힘들게 합의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을 어떻게 경제관료들과 공안세력이 손바닥 뒤집듯이 위반한 것에 있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서도 경제관료들은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잘 했는데 공안 애들이 캠페인을 쳤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이 문제를 중심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노·정 직접협상을 제안하고 나온 마당에 무슨 얼어죽을 노사정위이겠습니까. 노사정위는 되도록 ‘뭉개는’ 방향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아무 내용도 없는 ‘직접협상’에 발목이 잡혀 대응다운 대응을 못한 채 고비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의 틈새를 한국노총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정치력’ 인가 싶기도 하고, 여전히 ‘썩어도 준치’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솔직히 민주노총은 진형구 파동 국면에서 한국노총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를 협상의 중심으로 복원시키며 민주노총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었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인 노사관계제도개선위에는 나갈 수 있는데 노사정위에는 참가할 수 없다 … 노사정위에서의 협상은 거부하나 노·정 직접협상은 필요하다”는 등 민주노총의 주장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노사정위는 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기관인데 노·정 직접협상과 노사관계제도개선위는 그렇지 않다는 말인지, 노사정위에 참가하는 정부는 믿을 수 없는데 노·정 직접협상과 노사관계제도개선위에 나오는 정부는 믿을 수 있다는 얘긴지 알쏭달쏭 합니다.

### 4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내뱉은 노선이 부적절하다면 과감히 접어들이는 게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노총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듯합니다.

이미 노동조합을 구조조정의 들러리로 삼는 기구라는 게 드러난 마당에 노사정위에 무슨 미련이 그리 많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형구 발언 사태 이후 정권과 자본에 압도적으로 밀리던 역관계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쪽으로 약간 기울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야 하고, 그 수단은 현실적으로 노사정위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이것

---

밖에는 별다른 조직적 퇴각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노사정위의 본질을 '구조조정의 들리리기구'로 무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전술을 끄집어내는 것도 반대합니다. 모든 문제를 '본질환원론'의 시각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80년대 사회성격 논쟁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의 들리리 기구인 노사정위 본질의 자기발현과정.' 이런식의 인식이야말로 그토록 극복하려 했던 혜겔의 '본질환원론'입니다. 이런식의 노사정위에 대한 비판이 지나쳤는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노사정위 과대평가론'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나에게는 사후적으로 압장 정리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1기가 다르고, 제2기가 다릅니다. 설사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더라도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역관계가 다릅니다. 전술은 여기서 착안해야 합니다.

솔직해졌으면 합니다.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헌신짝으로 만든 게 누구입니까. 민주노총은 다 정부와 사용자 탓이라고 그립니다. 정부와 자본만 탓하면 모든 게 끝일까요. 과연 민주노총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을까요. 노동계가, 특히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잘 활용했다면 지난해 우리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용안정, 실업대책, 민주적 노사관계, 사회보장제도, 재벌개혁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황량한 논밭에 서서 자신의 솜씨없음과 게으름은 제껴둔 채 날씨와 땅만 탓하는 농부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짹이 없습니다.

## 5

제 직속 상급단체 언론노련도 실망스럽습니다. 언론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6월 <동아일보> 이현락 주필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정체불명의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취재해 <미디어오늘>과 <한겨례>에서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쪽은 국정원에서 이 문서를 훔쳐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정권이 언론 탄압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언론노련 역시 정권의 조직적인 언론 장악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국정원의 공안계통에 언론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공보쪽에 그런 부서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현락 주필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문건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것과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과는 구분해 대응해야 했는데, 언론노련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 갖다대는 잣대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갖다대는 잣대를 언론인에게 갖다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노련은 이현락 주필 땅투기 의혹 사건이 언론개혁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조선일보>가 최장집 당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의 사상 시비를 전 <월간조선> 11월호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떨어지자, 이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몰고간 선례가 떠오릅니다. 최근 <중앙일보>가 보광그룹에 세무 조사를 '언론 길들이기'로 몰고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언론노련은 본의 아니게 언론사의 자사 이기주의를 거들고 말았습니다. 과연 언론노련이 정부가 언론개혁을 위해 개입했을 때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재벌개혁에 대해 어정쩡한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손숙 전 환경부장관이 러시아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2만달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가자, 전국의 환경운동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진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환경단체들의 나름의 건강함, 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여전히 경계를 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이 모습과 이현락 주필 땅투기 의혹에 대한 언론노련의 대응과 자꾸 비교가 됩니다. 설마 이게 책에 나오던 신사회운동과 구사회운동의 차이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6

모두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자고 합니다. 그럴려면 갖춰야 할 게 있습니다. 자체 규율과 자기 혁신이 그것입니다. 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대한교총)가 신자유주의를 타고 넘으며 살아남고 있는 것처럼, 노동계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전의 노동운동노선의 잘못이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명분 아래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 규율은 요원한 채 노동계도 역시 '그렇고 그런' 이익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국민의 투사일까요. "요즘 노조 회계 개판이야. 제멋대로야." 슬프게도 얼마전 노동부에서 들려온 말입니다. 97년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부의 업무감사가 없어진 결과라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 ♦♦♦